

거대한 전환/칼 폴라니

문우진 (아주대 사회과학대 · 정치학)

칼 폴라니의 사상

폴라니는 경제이론의 제도주의 학파로 분류되며, 폴라니 연구자들은 그를 ‘구제도주의’ 학파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주장한다. 제도주의는 인간의 제도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핵심적인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나 로널드 코스(Ronald Coase)의 신제도주의와 칼 폴라니의 구제도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예컨대, 노스는 시장경제는 국가, 사적재산권과 시장의 헌법적 보호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는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반면, 폴라니는 시장과 정치는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이 둘을 분리했다고 주장한다.

구제도주의자들의 비판은 국가가 되었건 그 밖의 다른 사회제도가 되었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로부터 인간을 분리하려는 잘못된 시도에 집중된다. 이러한 시각은 보통 정치경제라 분류되지만, 구제도주의자들은 이러한 시각을 경제를 분석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경제 사상에 기반하여,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을 통해 자기조정적 시장을 신봉하는 하이에크(Hayek)를 반박하고 비판하려 하였다.

고전파 및 신고전파 경제학의 핵심은 ‘경제적 인간’이라는 개념이다. 경제적 인간은 효용극대화 행위를 통해 가격조정에 반응하고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조정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합리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역사적인 기원은 “인간의 본성은 물물교환·교역·교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아담 스미스까지 거슬러 갈 수 있다. 폴라니는 경제적 동기는 사회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제적 인간이라는 개념을 반박하였다. 폴라니의 이러한 믿음은 『거대한 전환』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폴라니가 사회사상에 공헌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엮어짐(embeddedness) 라는 개념이다. 경제의 자율적인 조정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이론에 맞서, 폴라니는 경제는 정치, 종교, 사회, 관습과 불가피하게 엮여져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폴라니를 잘못 이해를 하는 학자들은 폴라니가 19 세기부터 경제가 사회로부터 이탈(disembedded)하게 되었고, 이 결과 경제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폴라니가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경제가 이탈된 사회를 창출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폴라니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었고 달성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폴라니는 사회에서 이탈한 자기조정적 시장 경제는 유토피아에 불과하다고 아래와 같이 단언한다.

“우리의 이론은 자기 조정적 시장이라는 개념은 허구적인 공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의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본질을 파멸시키지 않고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이는 인간을 파괴시키고 인간의 환경을 황무지로 바꾸어버릴 것이다.” (Polany, 2001: 3)

<거대한 전환>의 내용

『거대한 전환』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의 『노예로 가는 길』(The Road to Serfdom)이 발간된 1944년에 발간되었다. 폴라니의 동시대 유럽 학자들이 역사 없는 이론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듯이, 폴라니의 주장은 역사와 이론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시장경제가 서구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더 나아가 제국주의적 정복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19 세기의 ‘거대한 전환’이 초래한 국제체제의 등장을 설명한다. 세 번째 부분은 당시에서 미래로 진행 중이라 믿는 전환과정에 대한 해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시즘의 등장과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이 두 부분에서 폴라니는 왜 1815 년에서 1914 년까지 평화를 누리던 유럽이 갑자기 세계대전과 경제적 붕괴를 경험했는가라는 수수께끼를 제시한다. 두 번째 부분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흥망성쇠에 대한 역사적 서술을 제시한다. 폴라니는 세계대전으로 인한 평화의 붕괴와 대공황의 초래한 경제 질서의 붕괴는 세계경제를 시장 자유주의로 조직하려 했던 것의 결과물로 본다. 즉 파시즘의 발흥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전환은 시장주의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거대한 전환』은 미시적으로는 역사적인 서술로 구성되어 있으나, 더 거시적인 주제를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거대한 전환』은 경제적 인간과 같은 고전파 경제학 개념에 대한 비판, 토지 및 노동과 화폐를 상품으로 보는 시각의 지적 오류, 사회적 삶과 경제적 삶의 분리의 치명적인 효과와 불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같은 주제들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인간

폴라니는 초기 사회에서의 경제적인 삶은 네 가지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상호성, 재분배, 가계, 그리고 물물교환의 원리는 각각 대칭성(symmetry), 구심성(centricity), 자급성(autarky), 및 시장(the market)이라는 유형을 가지고 있다. 폴라니는 인간의 교환성향은 지역 시장, 노동분업, 대외무역, 그리고 종국적으로 장거리 무역을 초래한다는 고전적 시각을 뒤집는다. 장거리 무역의 경우조차, 관습과 종교에 의해 규제되고 제한된 관계에 얽여진(embedded) 반면, 국가시장(national market)은 15 세기에서 16 세기에 서구 유럽의 강력한 중앙군주가 전쟁과 왕국통일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다.

상업사회에 공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촉발된 19 세기의 산업혁명은 경제적 인간상을 형성시킬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인간상은 농촌지역, 신노동조합, 그리고 차티스트 운동의 상호성(mutualism)의 상충되었다. 폴라니의 역사적인 서술은 인간의 행태는 역사에 달려있다는 사실, 즉 사회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확인한다. “인간은 원시적 상태에서부터 역사의 전개과정 동안 비역사적인 합리적 인간의 존재라는 관점이 암시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태를 보여주었다” (258).

허구적 상품: 토지, 노동, 화폐

플라니는 1820 년대의 자유주의 사조의 탄생을 묘사하기 위해 “계획경제가 아니라 자유방임 시장이 계획된 것이다”라는 구절을 구사했다. 노동은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만 하고, 화폐는 자동적 메커니즘(금본위제)에 종속되어야만 하며, 자본과 재화의 국제적으로 자유로운 이동은 이를 가로막는 장벽의 제거를 전제조건으로 한다(140-144). 경제적 자유주의에 중심적인 내용은 토지, 노동, 화폐 역시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다른 재화와 편의와 마찬가지로의 상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플라니는 상품은 시장에서 판매되기 위해 생산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토지, 노동, 화폐는 시장에서 판매되기 위해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모두 허구 상품이다. 노동은 단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인 활동이고 인간은 그 본능 자체가 (역사적으로 봐도 합리적인 최적화를 추구하는 인간형과 일치하지 않았고) 상품처럼 행동할 수 없다. 토지는 상품이라기보다는 자연물이고 인간의 생존기반이다. 화폐는 필연적으로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다. 뿐만 아니라, 플라니에 의하면 토지, 노동, 화폐를 상품으로 보는 시각은 또한 도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간 사회를 수십 세기 동안 지배해 왔던 원칙은 자연과 인간이 신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물인 토지를 마치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물건처럼 다루는 것은 규범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이다.

토지와 노동과 관련된 경제적인 삶은 19 세기까지만 해도 사회적인 삶과 연계되어 있었다. 봉건적 관계와 오래된 관습권은 토지에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고, 토지는 종종 공유지로 묶여 있었다.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빈민구제법, 숙련공 조례, 1662 년 조정법이 경제적인 삶을 규제하였다. 맬더스의 인구법칙(Law of Population)과 리카르도의 임금철칙(iron law of wages), 그리고 벤담의 효용주의에 의해 정당화 된 노동시장 창출은 1834 년의 신빈민법에 의해서 완수되었다. 신빈민법은 산업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구제책을 제거시켜 버렸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굶주림의 위협에 대응했어야 했고 배고픔은 공장과 작업장으로 자신을 내 몰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금본위제는 자기조정적 시장을 전 세계로 확산시킨 도구이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금본위제에서 각 국가들의 통화는 금으로 지지되어야 하고, 한 국가의 국제수지 적자는 그 국가의 금을 빠져나가게 해서 통화 공급을 축소시키고, 이율을 상승시키고, 물가 및 임금을 하락시켜서 수출을 증가시키게 된다. 1850 년대에 이르러 네 가지 제도(국가 간 권력균형, 자유주의 국가, 금본위제, 자기조정적 시장)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 플라니는 국가예산, 군비, 해외무역, 원자재 공급, 국가독립과 주권이 이제 통화와 신용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중적 운동 (the double movement)

사회로부터 경제를 이탈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반대 방향의 두 가지 운동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시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자유방임 운동이고, 다른 또 하나는 이에 저항하는 사회보호 운동이다. 신빈민법의 도입은 노동자들에 의한 최초의 정치적인 저항인 차티스트 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1830 년대에는 근대 노동조합이 두드러지게 형성되었다. 독일에서의 사회보장의 도입은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의 성장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금본위제의 의도는 통합된 세계시장을 창출하여 개인과 기업들의 경쟁 외에 어떠한 국가 간 투쟁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곧 무역수지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경제를 수축시키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노동자들과 농민의 소득을 격감시키고 실업을 증가시켜 기업과 은행의 파산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금본위가 초래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집단은 노동자와 농민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 집단들이 금본위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주기적인 경제 불황이 초래하는 은행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강화되었다. 자본가들조차도 사회 파괴적인 시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여러 형태의 보호 장치를 통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려 하였다.

첫 번째 수단은 보호관세를 매겨 무역의 흐름이 가격변화에 민감하지 않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급작스런 금 유출이 초래하는 불안정성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플라니에 의하면, 보호주의는 자유방임 시장을 방해하려는 집단적인 음모가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자유방임 시장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재난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두 번째 수단은 19 세기 말에 나타난 식민지 팽창이었다. 이는 식민지 자원 확보를 통해 금의 급작스런 유출이 초래하는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수단이었다. 이처럼 국경없는 세계를 창출하기 위해 발명된 금본위제는 결국 반대로 처음에는 국가 간의 장벽을, 나중에는 식민제국들 간의 국경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체제가 1 차 세계대전과 함께 무너졌을 때조차, 각국의 지도자들은 금본위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1920 년대와 1930 대의 경제공황은 결국 환율을 지킬 것인가 자국 국민을 시킬 것인가라는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인간의 자유를 희생시켜 시장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파시즘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플라니는 자기조정적인 시장 실패에 대한 유일한 도덕적 해법으로 민주정치에 의한 사회주의를 제안하였다. 그는 시장이 사회생활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부터 해방된다면, 민주정치를 통해 시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플라니는 루스벨트의 뉴딜이 사회주의 모형 중 가능한 하나라고 보았다. 사회보장제도는 노인들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이는 민주 정치 때문에 가능하였다. 민주 정치는 또한 노동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플라니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시각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억압적이라는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다. 플라니는 제도적인 규제와 통제를 통해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자유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